
문서번호 : 18-센터-02-01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담당자 송상교, 02-522-7283)
제 목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전송일자 : 2018. 2. 14.(수)
전송매수 : 총 3매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3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구성한후 1년 가까운 기간 작업 끝에 2018년 2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법문사 출판)를 펴냅니다. 종래 2010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1권이 발간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번에 발간된 2권은 그 후속 작업입니다.
3. 이 책에는 ‘삼성반도체 희귀질환업무상재해사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 등을 비롯하여 노동, 환경, 과거사, 성적지향, 정보공개, 정보인권침해 등의 분야에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 소송사례 24건이 실렸고, 총론에서는 2017년 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변론기와 국내외 공익인권소송 현황을 소개한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4. 해당 사건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 등이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직접 집필하였습니다.(별지 ‘목차’ 첨부). 구체적으로 각 소송사례마다 사실관계, 법적 쟁점, 주요 증거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여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5. 앞으로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등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인권소송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인식과 저변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양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6. 책자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목차

2018년 2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첨부1]

제 1 부 총 론

-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엄형국
-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 2 부 각 론

-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 김용민
-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엄형국·김도희
-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 삼성반도체 회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사건 / 조영선
-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해정
-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김기현
-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중보
-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이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의 3
-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